

## 구성원 소개

강훈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 분야에 정통한 소송 전문가입니다.

강 변호사는 △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리해 발전업체들이 발전용량을 증가시키는 전기사업변경허가와 사업자를 변경하는 사업양수인가처분을 하면서 법이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취소재결을 받아냈고, △ 새만금 내측 수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연료공급을 하는 행위가 해운법(제24조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해 "해운법 위반 전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새만금 내측 수역은 간척사업이 예정된 특수한 지역으로 기존 새만금 내측수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해운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고, 국내항 여부 등에 대한 판례도 전무한 상황에서 '새만금 내측 수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 해운법 적용 여부 등을 판단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강훈 변호사는 바른을 설립한 공동창업자입니다.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TEL.  
02-3479-2445

MAIL.  
hoon.kang@barunlaw.com

## 학력

|      |               |
|------|---------------|
| 1972 | 서울고등학교 졸업     |
| 197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1982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 1984 |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

## 경력

|           |                                                        |
|-----------|--------------------------------------------------------|
| 1985~1998 | 제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 1998~2018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 2005~2008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 2007~2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 2008~2009 | 청와대 법무비서관                                              |
| 2009~2011 |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
| 2010~201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 2018~2022 | 법무법인 열림 대표 변호사                                         |
| 2006~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                                       |

## 최근업무사례

[일반상사·민사소송]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소송] 분양계약 관련 명의대여수수료의 반환청구를 모두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2건)

[건설·부동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에 관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 공공기관의 지원금 지급 중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공직선거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건축행정  
건설소송  
재건축 재개발  
프로젝트금융 (PF)  
금융소송  
행정소송

## 주요 업무 및 활동

### 형사

-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
- K 전 장관에 대한 정치관여등 사건

### 행정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및 헌법소원
- 기부채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사건